

미혼모자를 위한 현실적 지원 시급하다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주최, “미혼모, 자녀...” 세미나서 밝혀

고아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의 직·간접 원인이 되는 ‘미혼모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혼 모자세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적은 지난 12일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회장·김민제)가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연 ‘미혼모 자녀의 현황 및 복지대책’ 세미나에서 나온 것. 즉 미혼모들이 시설 퇴소 시 생계유지비 및 정착금의 지원 미혼모를 윤락녀와 동일시하는 통념, 법적문제

등의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혼모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이 각 시, 도 부녀아동상담소 및 전국 입양기관의 상담실적을 토대로 집계한 미혼모 발생수는 80년 3천1백46명에 비해 87년은 1만2천5백4명으로 증가, 89년부터는 6천1백56명으로 다소 감소한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지 상담에 응한 사람이 감소한 것일 뿐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연령층은 85%가 19세에서 25세가 대부분으로 이들 모두 직업이 불완전한 상태.

그런 이유로 이들 모자세대가 한 가정으로 자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상순(애란원 원장) 씨의 주된 발표 내용이다.

한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이들이 출산 전 후 단기간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은 서울의 경우 애란원, 구세군 여자관, 은성기

술원, 자매복지원 등 4곳 밖에 없다는 것. 미혼모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해 부녀직업보도소에서 기술을 익혀 자립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원장은 “미혼모들이 미혼모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직업교육을 받고 퇴소한 후 3개월 이내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면 피복비 10만원과 결혼정착비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입소 후 퇴소하는 기간이 대부분 3개월 이내이므로 이 도움마저 현실적이지 않다”

고 밝히고 퇴소자 정착금을 지급하든지 모자원에 직·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허남순(한림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입양금지 발표 이후 2년이나 지났지만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미혼모자녀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양전 가정위탁은 지원금이 한달에 아동당 1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앞으로 미혼모 자녀의 문제는 범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